

아산-SIPRI 국제회의 세션 1 주요 발언

“北 4 차 핵실험시 美 MD 확대 논의 가열” 더글라스 카네기 부회장

아산-SIPRI 국제회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럽의 신뢰안보구축 경험”

제 1 세션: 동북아시아 안보환경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7 월 9 일 외교부의 후원으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과 함께 연구원 1 층 강당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NAPCI):아시아 패러독스를 넘어 평화 협력의 동북아로’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연구원의 최강 부원장 사회로 진행된 제 1 세션엔 이안 앤소니 SIPRI 소장, 진 찬룡 중국 인민대 교수,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더글라스 팔 카네기평화재단 부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세션에선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어떻게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여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세션의 민감한 주제였던 북한의 4 차 핵실험 문제와 관련, 팔 부회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확대에 대한 논의가 가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석자의 한 명인 일본 국방대 교수 겸 국제 프로그램 디렉터인 야마구치 노보루 전 장군은 “핵실험을 할 경우 일본은 북한을 제제할 것인데 아직 활용할 수 있는 20 여 개의 대안이 있다”면서 “북한 제제의 핵심엔 자금 창구인 만경봉호 입항금지가 있으며 입항해지는 당근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중국이 지금 북한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벌어진 토론에서 최 부원장의 현 지역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요구에 앤소니 소장은 “지난 10 여 년 동안 군비 지출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국가들이 대부분 아시아에 있다”며 “북미와 비교했을 때 1980 년대엔 1/4 수준에 머물렀던 지출이 현재는 약 50% 정도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 군비확대에 대한 장기적 경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세계 2 위· 3 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는 지역을 넘어 세계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무력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 차이에 대한 관용을 갖추고 공통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부정적 요인으로 ▶미중 간에 깊어지는 전략적 불신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분쟁 ▶한일관계 악화 ▶북한 문제와 김정은의 지도자로서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미국과 중국에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기저의 상호 연관성이 깊어지고 있어 양국은 갈라설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두 나라가 민족국가가 아닌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관계와는 그 양상이 다를 것이며 갈등이 아무리 강해도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재균형)’정책에 대해서도 “2010 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 회귀 정책을 발표했을 때 중국은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 정책이 견제와 포용의 중간에 걸쳐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에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근 교수는 아시아 지역을 ‘이성적인 아시아(rational Asia)’와 ‘감성적 아시아(emotional Asia)’로 분류하고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결하는 것이 아시아를 더욱 이성적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시장과 다자주의를 주요 원칙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주목해야하며 중국이 이 국제질서 속으로 편입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주변국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이 질서를 따르도록 유도해 안보 딜레마를 증가시키고 있는 나라 사이의 양자 체제를 다자 체제로 대체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팔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환영할 만한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과거부터 ASEAN, APEC, 6 자회담에 참여하며 아시아 국가간에 제도적 협력이 성숙되기를 기대를 했지만 모두 실망스러웠다”면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에 안보상황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시리아 사태나 크림 반도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지도력 부재가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 팔 부회장은 동북아만이 아닌 아시아 전체를 다루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역내 국가들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로부터 눈을 돌릴 필요가 있으며, 어족자원과 같은 비전통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중간규모 국가(미들파워)들이 '어족 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 같은 것을 발의하는 게 오히려 지역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안 소장은 "NAPCI를 위해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역내국가들이 변화를 과정에 포함시켜야하며 모두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에 대해 진 교수는 "중국이 최대한 설득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한 북한이 언젠가는 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근 교수는 "추가적인 단독 및 다자 제재가 논의되겠지만 6자회담 이상의 새로운 선택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팔 부회장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 확대에 대한 논의가 가열될 것이며 미국만의 강력한 일방적 금융제재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BDA)은행에 대한 금융제재를 하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부수적 피해 없이 효과적인 금융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미국이 대북제재 및 관계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고 해도 북한이 태도를 바꿀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